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5
----------	-----

발의연월일 : 2024. 6. 13.

발 의 자 : 오세희 · 한정애 · 박정현
민병덕 · 김동아 · 복기왕
박 정 · 김영배 · 이수진
김 윤 · 조인철 · 문금주
임호선 · 김영환 · 강준현
강유정 · 이광희 · 양부남
박희승 · 김성환 · 민홍철
이재강 의원(22인)

제안이유

2020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에 대한 방역조치에 의해 소상공인이 경영난에 처하여 정부는 정책자금,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였음. 방역조치가 종료되고, 대출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은 이자 납부와 대출 상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률이 정책자금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에 한정되어 있어 금융기관의 채무 조정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금융기관이나 정책자금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경 및 보증 지원, 대출의 감면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적용 대상으로 함(안 제5조).

나. 소상공인이 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할 경우 5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상환을 유예하게 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소상공인이 요청할 경우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장기분할상환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소상공인이 이자감면을 요청할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사에 따라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소상공인이 부채를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그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금융기관으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이자감면,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하도록 함

(안 제10조).

사.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대상자 및 지원규모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정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부채가 없거나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여 온 소상공인에 대한 향후 정책자금의 우선 지원 및 부채를 조기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 등을 규정함(안 제15조).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2020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영 악화 및 부채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방역조치”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행된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자.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

4. “정책자금”이란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
3항에 따라 대출받은 자금

나.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정부가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자금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적용 범위) 이 법은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으로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 ①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장기분할상환) ①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장기분할상환을 신청할 경우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장기분할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분할상환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이자 감면) ① 정부는 방역조치의 시행기간 중에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이자감면을 요청할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소상공인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감면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대출의 감면) ① 정부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출 감면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① 금융기관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2. 상환유예
3. 장기분할상환
4. 이자 감면
5. 채무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제11조(금융지원의 신청 및 절차) 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금융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금융지원의 대상자 및 지원규모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심의하여 정한다.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금융지원의 업무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보증 지원) ① 정부는 제2조제3호사목부터 하목까지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1.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것
2.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부채상환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
3.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부채의 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채무조정 기본원칙) 채무조정은 소상공인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14조(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9조

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 대출 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법인·단체의 장,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소상공인의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개업일, 폐업일, 업종 등 필요한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 대출 규모를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 대출 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중소기업부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대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

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그 밖에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채무상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부채가 없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향후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②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채 조기 상환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부채를 상환기일 전에 상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환액에 대한 이자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6조(재원)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금융지원 및 금융기관의

손실 보전을 위한 자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